
〈후속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여성대발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쟁하겠다!

○ 일시: 2022년 5월 17(화) 오전 11시

○ 장소: 전북도의회 앞

○ 순서

- 연대발언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 낭독

박두영 (민주노총전북본부 본부장)

최장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사무국장)

양은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주최 단위〉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군산여성의전화,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페미니즘학회동행

(총 41개 단위 참가)

- 담당 : 채민 차별금지법제정전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010-8639-0214)

<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지난 4월 1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두 명의 활동가들이 모든 사람이 고르게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오늘로 37일이 되었다. 두 사람이 곡기를 끊은 지 40일이 가까워져오는 동안 시민들이 국회에서 목격한 모습은 참담할 뿐이다. 국회는 평등사회의 법상에 함께 앉기를 바라는 단식자 두 사람과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논의를 시작할 때는 이미 15년 전이었고, 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10만 국민동의청원과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대선 기간의 여론조사에서 70%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법이었으며, 어떤 대선후보의 지지율도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지지율을 넘어서지 못했다. 최근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6.6%가 차별금지법 찬성했고, 5월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57%가 성적지향, 성별, 장애, 학력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에 대해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치권이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착각하는 것과 다르게 시민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을 넘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첫 공식 보고안건으로 차별금지법이 다루어졌다. 의총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공론화조차 되지 못한 현실은 시대적 요구 상황에 맞지 않는다’, ‘최소한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고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공론화 정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반성을 한다면 15년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에 미뤄온 행보를 중단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나중’에 미루겠다는 정치는 더 이상 시민들에게 필요하지 않다. 민주당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국회에서의 공론화가 아니라 이제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사과하고 법 제정에 함께 해야 한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장애인 시민들의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요구를 매도하는 혐오 선동으로 표를 모으려는 퇴보적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작

제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성비위를 비롯한 차별과 혐오 조장의 전력이 드러나며, 여당과 윤석열 정부 스스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혐오와 차별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퇴행적 정치를 중단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야 된다.

시민들은 차별과 혐오를 철폐하고 모두가 존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는데도 국회의원들만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만들고 있는 시민사회에서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정책질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전북지역 국회의원 단 한명도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으며 타 지역의 지역구 의원 대부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차별과 혐오라는 민생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사회에서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투표하라 고만 할 것인가. 차별의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들에 의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계속되었다.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 장들이 성소수자 혐오를 선거 공약으로 밝히고 공식행사에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고, 기초의원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발언을 하며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6.1 지방선거는 민생을 책임지는 선거가 아닌 권력다툼일 뿐이다.

이에 오늘 13개 지역에서 더 이상 정치권력 유지만을 목표로 한 선거논리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 것을 함께 외친다. 시민들이 차별 없이 존엄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정치권이 가로막지 말라는 경고다. 우리는 제8대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본선거 기간 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차별과 혐오 선동을 표현의 자유라고 외치며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가로막는 이들이 아니라 차별 없이 존엄함을 누려야 한다고 외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주인들이다.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한 법 제정을 늦추고 막아서는 세력을 거부할 것이다. 우리는 차별 없이 존엄한 평등사회를 위해 싸우는 전국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차별금지법을 쟁취할 것이다.

2021년 5월 17일

차별금지법있는 나라에서 투표하겠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국동시다발기자회견전북지역참석자일동

[첨부자료1] 지역구 국회의원 차별금지법 정책질의 내용 및 답변 현황

1. 정책질의 내용

▣ 발송일 : 2022년 5월 12일(월) ~ 13일(화)

▣ 답변기한 : 2022년 5월 16일(월) 18:00

< 질 문 >

1. 귀하께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차별이 심각한 문제라는데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합니다. 2)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2. 한국사회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민들은 지역, 성별, 연령, 정치성향 등을 불문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합니다. 2)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3. 차별과 혐오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선거 논리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또다시 미루는 것은 지금 문제되고 있는 혐오정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보면서 즉각적인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방선거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1) 동의합니다. 2) 동의하지 않습니다. 3)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 () 국회의원

2. 정책질의 답변 현황

- 답변 없음 : 김윤덕, 김성주, 김수흥, 신영대, 안호영, 이원택, 이용호, 한병도 국회의원
- 기 타 :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일정 등으로 기한이 촉박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차후에 답변하겠음)

[첨부자료2] 2022. 5. 6.자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94호(2022년 5월 3~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결과)

질문) 성별, 장애,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 제정해서는 안 된다] (순서 로테이션)

2022년 5월 1주 (3~4일)	조사완료 사례수 (명)	가중적용 사례수 (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한다	제정해선 안 된다	모름/ 응답거절
지역별 전체	1,000	1,000	57%	29%	14%
서울	191	189	60%	27%	14%
인천/경기	317	316	53%	33%	14%
강원	31	30	-	-	-
대전/세종/충청	99	106	59%	27%	14%
광주/전라	99	98	67%	20%	13%
대구/경북	96	98	52%	31%	17%
부산/울산/경남	153	151	58%	26%	16%
제주	14	13	-	-	-
성별 남성	517	496	59%	28%	13%
여성	483	504	56%	29%	15%
연령별 18~29세	141	172	57%	30%	13%
30대	132	151	60%	29%	11%
40대	180	186	66%	23%	11%
50대	222	195	64%	23%	13%
60대	192	165	52%	34%	14%
70대 이상	133	132	40%	35%	25%
주요 지지 정당별 국민의힘	411	401	44%	41%	15%
더불어민주당	400	406	<u>71%</u>	18%	11%
정의당	33	31	-	-	-
무당(無黨)층	149	156	54%	27%	18%
직업별 농/임/어업	48	42	-	-	-
자영업	180	170	57%	30%	13%
기능노무/서비스	132	125	62%	25%	13%
사무/관리	302	312	64%	26%	11%
전업주부	175	175	44%	36%	20%
한상생	63	76	53%	32%	15%
무직/은퇴/기타	100	99	60%	27%	14%
성향별 보수	323	317	46%	41%	14%
중도	304	309	59%	28%	13%
진보	302	303	<u>72%</u>	17%	11%
모름/응답거절	71	71	42%	27%	31%
본재인 대통령	442	448	69%	18%	13%
부통령	513	506	47%	39%	14%
헌법선인	414	412	48%	37%	15%
부정	470	476	69%	20%	11%
평소	267	255	57%	32%	11%
정치에	516	516	59%	28%	13%
관심이	162	168	55%	28%	17%
전혀	55	61	51%	26%	23%

- 50사례 미만은 수치 제시하지 않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494호 www.gallup.co.kr